

주간 테러동향 (제470호)

'25. 9. 19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테러 이슈

ICCT1), 美-동맹국 테러 단체 지정에 대한 견해차이 분석

ICCT는 글로벌 테러단체 지정 기준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며, 구체적인 사례와 향후 전망 등을 분석

□ 주요내용

○ (개요)

- 테러 단체 지정제도는 많은 국가 및 국제 조직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, 각국의 정의·법제·안보 우선순위에 따라 내용이 상이
- 미국의 FTO 리스트는 그간 글로벌 '트렌드세터(Trendsetter)' 역할을 해왔으나, 동맹국과의 동조가 깨지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감지
- (미국) 기존 '이슬람주의 계열', 전통적인 테러단체 외에 △멕시코 마약 카르텔 △중·남미 갱단 등 범죄조직을 FTO 리스트에 대거 추가
 - ⇒ 이러한 변화는 법률적·이념적·실무적 맥락에서 기존의 '정치적, 이념적 테러리즘'과 범죄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의미
- (동맹국 등) EU, 영국, 캐나다, 호주 등은 극우,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들을 테러 조직 목록에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

○ (향후 전망)

- 미국의 최근 조치는 테러의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보이나, 테러단체 지정 과정에서 투명성·일관성 관련 개선이 필요하며,
- 제재와 지정제도는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때 효과가 증대되므로, 미국-동맹국간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
 - ⇒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테러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 중으로, 이는 공동전략 수립, 정보공유, 공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¹⁾ ICCT(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-Terrorism): 대테러 전문 싱크탱크로 201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으며, UN·NATO 등 국제기구와 협력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태

○ 日, AI 활용으로 '단독 테러' 사전 차단 추진

○ 韓,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

- 9.16 언론은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하였으며, 검찰은 "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,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"을 강조하였다고 보도

○ 韓, 10월부터 '불법무기류 집중단속' 돌입 예정

- 9.15 언론은 경찰이 지난 7월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'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'을 8~9월 확대 운영 중인 가운데, 10월부터는 사제 총기에 초점을 맞춘 '불법무기류 집중단속'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

○ 네팔, SNS 접속 차단 반발 시위로 30명 사망·1만 5천명 탈옥

- 9.11 언론은 네팔에서 정부의 SNS 차단에 반발한 反정부 시위가 격화해 30명 이상 사망하고 1만5천여 명 수감자가 탈옥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, 시위대는 前 대법원장을 임시 수반으로 추대하여 정상화를 모색 중이라고 보도 ※ 언론은 정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엑스 등 26개 SNS 접속을 차단한 것이 도화선이라고 부언

○ 파키스탄, 무장단체 매복 공격으로 군인 12명 사망

- 9.13 언론은 파키스탄 카이버팍툰과州에서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으로 보안군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으며, 사건발생 후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이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헀다고 보도

중 동

- 이스라엘,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암호화폐 15억 달러 압류
 - 9.16 언론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187개를 몰수했으며, 해당 조치는 혁명수비대의 암호화폐 활용을 차단하려는 국제적 압박의 일환이라고 보도

미주

- 美, 대통령 최측근「찰리 커크」대학 연설 중 총격 사망
 - 9.11 언론은 「도널드 트럼프」의 최측근이자 청년 보수정치단체 대표 「찰리 커크」가 유타大 공개 토론회 도중 총격으로 사망하자 미국 사회에 충격이 확산되고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보수 진영에서는 "좌파의 극단성이 암살을 부추켰다"라고 주장하고, 진보 진영에서는 "총기 문제를 경시한 결과"라고 맞서고 있다고 부언

유 립

- 佛, 20만명 反정부 시위로 화재, 도로 봉쇄 등 혼란 발생
 - 9.10 언론은 프랑스 전국에서 「마크롱」대통령의 퇴진과 빈부 격차, 복지악화 등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약 20만명의 시민이 시위 중이며,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중순부터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보도
 - ※ 언론은 「바이루」前 총리를 해임하고 최측근인 「세바스티앙 르코르뉘」 前 국방 장관의 신임총리 임명과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니제르, IS연계 무장단체 민간인 공격 증가
 - 9.10 언론은 니제르에서 ISIS-SP(사헬지부)의 민간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, 부르키나파소, 말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지역은 ISIS-SP의 활동 중심지이자 반군 소탕 작전지역이지만 정부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英, 런던 지하철역 급조폭발물(IED) 테러 발생

- '17.9.15 英 런던 남서부의 '파슨스 그린역'에 정차한 열차의 출입문이 열린 직후 열차 內 급조폭발물이 폭발하여 30여 명이 부상
 - 좌석 옆에 타이머가 장착된 폭발물이 담긴 가방이 놓여있었으며, 설치된 폭발물 중 일부만 폭발하여 피해 규모는 다소나마 경감
- 테러 직후, ISIS는 선전매체 '아마크 통신'을 통해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이 파견한 전사들이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
- 영국「테리사 메이」총리는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, △테러 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'위급'으로 격상, △軍병력 및 무장경찰 주요 교통망에 확대 배치, △대대적인 용의자 추적 등 지시
 - 경찰 당국이 CCTV 확인 등의 수사를 통해 총 6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고, 이들은 10대·20대로 구성된 이라크·시리아 난민들로 확인
- ⇒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정 시설에 다수가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취약요인 점검·위력순찰 등 대테러 안전활동에 만전

테러 상식

〈급조폭발물(IED: Improvised Explosive Device) >

- (정의)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직접 제작한 폭탄이나 폭발물 또는 기존 폭탄을 개조한 형태의 폭발물을 의미
- (특징) 다수는 기존 폭탄에 기폭장치를 추가하여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나 현장에서 조달가능한 재료를 조합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음 은밀하고 기습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비정규전이나 테러에 주로 사용
- (대응) 전파교란 기술을 이용하여 IED의 원격조종 기폭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. 현장 및 폭발물의 특성에 따라 사용이 일부 제한됨